

광주변호사회, 연내 '힘세진' 경찰 평가 시행

법관·검사 평가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커진 경찰 견제 서울 이어 전국 2번째...평가특위, 대상·방법 등 세부안 논의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역 법관·검사 평가에 이어 '경찰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제도 설계에 나섰다. 이르면 연내 처음 시행될 경찰 평가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힘이 세진' 경찰을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 수시로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평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변호사회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연내 경찰 평가가 시행될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은 전국 두번째가 된다.

9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는 경찰 평가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정 '경찰평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하재욱 광주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위원

장으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 안에 경찰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업 회원 554명(6월 말 기준 휴업 포함 709명) 가운데 희망자가 광주전남지역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평가특위는 변호사회 내부 근거 규정 마련, 평가 대상 단위, 평가 방법 등 제도를 설계 중이다.

구체적 평가 방식은 확정 전이지만 광주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법관·검사 평가와 큰 틀에서는 유사할 것이라는 게 다수 변호사의 의견이다. 광주변호사회는 매년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10명 이내의 우수·천절 법관, 검사를 선정해 구체적 사례와 함께 공

개하고 있다. 반면 하위 법관·검사는 익명으로 공개 하되 변호사들이 저평가 한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100-200명 수준의 지역 판·검사와 달리 경찰은 광주·전남에만 1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이 평가에 있어서 부담이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8월 4일 현재 3695명에 이르고, 총경·경무관·치안감 등 고위직은 21명이다. 전남의 현원은 5748명, 총경 이상 고위직은 39명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 과장인 경정은 243명, 일부 전남지역 경찰서에 과장으로 보임되는 경감만 1617명에 이른다. 이에 변호사 회원들이 겪는 개개의 경찰관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지, 과·팀 등 부서 단위 혹은 보직 간부를 평가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평가 세부 항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평가에 돌입한 서울변호사회는 올해 2회째 평가를 진행 중이다. 서울변호사

회 평가지를 보면 변호사 회원들이 서울 경찰 개개인(소속 관서, 부서, 팀, 이름)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청렴성·중립성·인권의식(친절도)·적법절차 준수·직무능력 등 7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설문에는 사례를 기술하는 공간도 뒀다. 다만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첫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경찰청에만 참고용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권한이 커져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 직무 집행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어지도록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평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양 60대 부부 탄 차량 가로등 들이받아 사망

광양에서 60대 부부가 타고 가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부부가 숨졌다.

9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께 광양시 성황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63)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교통섬을 넘어 가로등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함께 탔던 아내 B씨(63)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A씨가 몰던 차량은 3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벗어나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km 속도제한 도로였지만, A씨 차량은 이를 넘어선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CCTV 등을 통해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혜 의혹' 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전남도, 내달 8일 3자 합의서 공개 결정

전남도가 '건설사 특혜 의혹'에 휩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전남도가 나주시·부영주택과 맺은 3자 합의서를 공개하겠다"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광주경실련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 35만여㎡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여기에 부영주택이 아파트 5300여 세대를 짓는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중 상향하는 것은 부영주택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안겨주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서 제기됐다.

광주경실련은 '특혜' 보장을 위한 내용이 지난해 맺은 3자 합의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합의서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 정보공개 거부 사유였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증여하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처리에 9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전남도 등은 지난 주 심의위를 열고 3자 합의서를 정보 공개 결정하고 8일 경실련에 통지했다.

3자 합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8일 공개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3 교실은 '수능 열풍 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9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잔소리에 어머니 살해 아들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지난 4월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양 거주 40대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도 9일 열린 A(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신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 방법 또한 잔혹하며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품을 유용하거나 휴대

전화를 도피용으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단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강제동원 망언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해임하라"

광주 시민단체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강제동원 관련 망언을 한 윤덕민 선임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에 재를 뿌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도 굴욕감을 안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윤 대사가 지난 8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금화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보복이 무서우니 역사 정의, 사법 주권,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지는 것"이라며 "일본 앞에서 몸을 낮추는 굴종주의가 내재화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모임은 9일 열린 외교부 3차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도 "기만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특별 현금과 명령과 관련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할 것을 압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마지막 채권확보 수단마저 쟁쟁 묶어놓고,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마저 불찰을 선안한 상태에서 민관협의회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